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1. 9. 1.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1. 8. 22. 조남진 의원 외 7명

나. 회부일자 : 2011. 8. 29.

다. 상정일자

- 제163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2011. 9. 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윤동현 위원)

가. 주 문

- 마포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면서 금번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 방위백서를 통하여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함은 물론 지난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으로 입국거부 방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등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堂堂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나. 제안이유

-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년 방위백서를 통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독도침탈 야욕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결의함.

3. 검토보고의 요지 (김은모 전문위원)

- 본 안건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8·15광복 66주년을 맞이하는 현재도 일본정부가 독도를 계속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 이에 마포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 동안 외교마찰 등을 우려하여 독도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이제는 공격적이고 체계적인 조치 등을 강화하여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처음부터 차단함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을 제안 함은 시의 적절한 조치 임.
- 지난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3명이 입국거부 방침을 통보하였음에도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등 갈수록 독도침탈 야욕을 드러내고 있고, 최근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년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철회하고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토록 촉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 됨.

- 우리 정부도 자주 주권국가로서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보전 의지로서 우리 땅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며, 마포구의회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을 사전에 분쇄하기 위하여 규탄 결의안을 제안함은 당연한 조치 임.
- 따라서, 이러한 일본정부의 독도침탈 야욕행위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사료 됨.
- 이에 마포구의회는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일본이 또 다시 한·일 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본 결의안으로 채택하고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과 외교통상부 등 관련 단체로 이송하여 일본정부가 다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억지주장을 하지 못 하도록 대한민국 정부도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다시 한번 세계만방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 타 : 없음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11 - 63
----------	---------

발의년월일 : 2011. 8. .

발 의 자 : 조남진의원 장영숙의원
윤동현의원 송병길의원
강성국의원 이필례의원
유동균의원 조영덕의원

1. 주 문

마포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면서 금번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 방위백서를 통하여 영유권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함은 물론 지난 8월 1일에는 일본 국회의원 3명이 울릉도를 방문하여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계획으로 입국거부 방침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을 통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등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일본정부는 독도를 일본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교청서 및 2011년 방위백서를 통하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는 독도침탈 야욕을 다시금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한·일 양국간 선린우호 관계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점에 양국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강력하게 규탄하며 일본정부가 이를 취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 보전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결의함.

3. 보낼 곳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외교통상부 등

일본의 독도 침탈야욕 규탄 결의안

마포구의회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으로 또한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하면서 금번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하고 외무성이 발표한 외교청서 및 2011년 방위백서(국방정책과 군사전략)를 통하여 독도 영유권에 대하여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독도 침탈야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40만 마포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재천명한다.
1.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해서 기술·표기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승인한 행위와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를 통한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1. 일본은 또 다시 한·일 관계의 불행한 과거사를 재현시키고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확고한 영토보전 의지로 당당하게 주권을 행사하고 실효적 지배를 위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